

광주 군공항 해법 마련 후 민항 이전 ‘산넘어산’

민간공항, 2018년 ‘조건없는 이전’→2020년 ‘조건부 이전’
군·민간공항 연계 이전·공항 명칭, 4자 협의체로 공 넘겨
“시민의 뜻·상생·국가정책 vs 상생 위배·허술한 협약 자인”

공항 갈등과 관련한 광주시의 최종 선택은 결국 ‘선(先) 군공항, 후(後) 민간공항’으로 결론이 났다.

단어의 표현과 추진 절차에는 다소간 차이과 간극이 있지만, 결국 답은 ‘민간공항을 이전 하되, 군공항 해법없는 민간공항 이전 없다’로 귀결된다.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 간 ‘공항 이전 상생 협약’ 당시 공언한 ‘조건없는 이전’이 ‘조건부 이전’으로 명확히 변경된 셈이다.

결정 주체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까지 아우른 4자 협의체로 못 박았다.

통합공항 명칭도 ‘광주무안공항’이라는 다수 여론에 따르되, 이 역시 4자 협의체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광주시가 선택한 최종 카드는 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 시장에게 제출한 정책권고문과 상당 부분 꺾을 같이한다.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당초 약속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친 반면 시민 10명 중 8명(79.5%)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

전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에게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이자 시정의 소비자인 ‘시민의 뜻을 따른 셈이다.

‘공’을 4자 협의체로 넘긴 것도 민심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시민권익위 설문 결과 군공항 이전이 지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시민 4명 중 1명 꼴로 ‘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을 꼽았고, 추진 주체에 대해서 과반에 가까운 45.5%가 ‘국방부 등 중앙 정부’를 꼽아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 못지 않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 스스로도 9일 ‘평소 소신에 따라 훗날 역사적 평가, 광주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 국가발전과 상충되지 않는 길을 택했고, 시민권익위의 권고와 광주·전남 상생, 정부공약정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내린 신중한 결론이지만, 여론모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선, 약속 파기 논란이 일 수 있다.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조건없이 통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합하는 것을 골자로 체결한 상생 협약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어서, 시민권익위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시·도간 갈등만 키우는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장 스스로도 군공항 해법이 먼저 나오지 않는 한 민간공항부터 먼저 옮긴 수 없다는 데 대해 “그렇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단체장의 공언이 180도 뒤집혔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차지하고라도 2년 전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인 점도 문제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정책권고에 앞서 지난달 11일 “2년 전 협약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며 “명성한 협약”에 대해 공개 비판한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협상파트너인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도 고위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상생에 배치되고 부적절하다. 4자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협의하는 기구로, 민간공항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시가 민간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도 통합문제도 다시 생각해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시가 최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 업무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하고, 국무총리실엔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것도 군공항 이전을 장기과제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민간공항 이전 시기도 ‘2021년’이 아닌 ‘무기약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미희기자

“현금카드·주차권 통해 감염” 광주서 불특정 감염 확산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최근 광주지역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계산 업무 종사자의 손세정제 사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8면)

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769명으로 증가했다.

광주769번은 서구 풍양동 거주자이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769번처럼 최근 지역에서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와 증상 발현 후 뒤늦게 검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지역감염자가 총 237명 발생했으며 이 중 33명의 감염경로는 파악이 안됐다.

또 33명을 통해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연쇄 감염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마트 종사자들이 계산을 할 때 비닐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 손님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을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주차장 관리자는 확진자가 제출한 주차권을 손으로 만져 감염되기도 했다.

또 계산업무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확진자가 건넨 현금을 손으로 접촉해 감염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발열과 두통, 후각·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직장 출근 등의 이유로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했다.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뒤 검사를 받았다.

지난 8일 확진자 중 1명도 증상이 수일전부터 나타났지만 병원 등과 마트 등을 방문한 뒤 검사를 받아 역학조사 범위가 넓어졌으며 밀접속자도 많아 추가 검사 건수도 증가했다.

광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중을 접촉하는 종사자들은 손 씻기, 손세정제 사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나주 오리농가 AI도 ‘고병원성’ 확진…전국 6번째

3km내 9개 농가 오리 19만1400 마리 예방적 살처분



나주시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도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관련기사 8면)

9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견된 나주 A육용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이날 오후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나주 A오리 농가는 지난 5일 전남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은 이웃 영암군 시종면에 소재한 육용오리 농가와 같은 계열 농가로 전남에선 두 번째로 확진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전북 정읍, 경북 상주, 전남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에 이어 이번이 6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사례가 됐다.

나주시는 앞서 농장 간 수평 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A오리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3만 2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오늘(9일)은 3km 이내 세지·봉황·왕곡면에 소재한 9개 농가 오리 19만 1400마리를 살처분하기 위해 운영업체 인력

30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3km 이내 산란계 3개 농가에서 기르는 닭 29만4000마리는 AI 검사 결과 전체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농장주들의 반대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 당국은 A오리농가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나주시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나주시역 가금류 사육 규모는 126농가에서 오리(67농가) 115만8000마리, 닭(64농가) 437만4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